데스크 탑

‘혼란의 부동산’ 경제 논리에 맡겨야

서미애
국장 겸 경제부장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의 반응에 관한 기사가 봇물처럼 넘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의 전철을 밟거나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어찌 된 일인지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만 하면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들은 ‘청개구리 부동산’으로 받아들여 ‘정부 정책의 반대로 가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강하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정치권은 우왕좌왕한다. 그 사이 집 없는 서민과 돈없는 청년들은 희망을 잃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은 맥을 못추고 있지만 부동산 폭등세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나라 부동산은 경제시장논리가 아닌 정치 논란의 중심에 자리잡았다. 코로나19에 묻혀 있을 뿐 부동산 문제는 지금 정치권의 ‘핫이슈’이고 차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중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오죽하면 “정부는 제발 부동산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을까. 부동산대책이 나올 때마다 ‘억’ ‘억’하는 소리가 난다. 반면에 투자자들은 규제와 관련된 위험요소가 무엇일까보다 ‘이번에는 어디가 로또가 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 정책 ‘풍선효과’

그럼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지난 1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 주택 10채 가운데 8채는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지역 주택수는 52만6,000가구로 전년(51만5,000가구)에 비해 2.2%(1만1,000가구) 늘었다. 광주에서는 주택 10채 중 8채는 아파트라는 뜻이다. 전체 59만6,000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도 66.3%나 돼 세종시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광주에서는 30년 이상된 낡은 아파트 비율이 높고 인구는 정체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아파트 공급이 늘었고 앞으로도 민간공원 아파트 등 수만 세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해 공급 과잉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고가-저가 아파트의 가격차가 더 벌어졌다. 저가 아파트는 소폭 하락했지만 고가 아파트는 소폭 상승하면서 가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광주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대형은 5억9,622만원, 소형은 9,330만원이었다. 중대형과 중형, 중소형은 각각 4억3,838만원, 2억6,275만원, 1억3,525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놓은 23번의 대책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혼란만 불러 일으켰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터지는 ‘풍선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더 강한 추가 대책을, 시장은 더 왜곡된 틈새를 찾고 있다. 악순환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부동산 시장이 백기를 들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노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시장이 정책의 사각지대, 즉 헛점을 찾으면 정부는 이를 막을 또 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다. 땜질 정책이다. 대표적인 것은 지난달 국회를 빠르게 통과한 ‘임대차 3법’이다. 정부는 시장 혼란이 계속되자 해설집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대료를 5%까지 올릴 수 있는지, 계약 갱신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지 등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힘을 과시하느라 여념이 없다. 정부가 만들려는 부동산 감독기구는 시장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개인 간 거래에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팽배해 있다. 또 부동산 감독기구가 국세청의 탈세 적발, 금융감독원의 대출 감시, 검찰의 사법 처리 기능을 모두 갖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유동자금 부동산 쏠려

부동산 폭등은 근본적으로 시중자금의 유동성 관리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저금리에 기반한 풍부한 시중자금이 산업자금으로 가는 대신 ‘부동산 불패론’을 좇아 부동산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과 세제 양쪽 모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장이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따로 움직이면서 ‘패닉현상’에 따른 묻지마식 투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부동산 문제는 이미 차기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부동산 문제는 이제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해치고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문제로 비약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부동산 폭등이 지속되는 한 어떠한 부동산 개혁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고

남구만의 복지플랫폼 7979센터에서 행복을 찾다

한장숙
광주시 남구청 희망복지국장

문재인 정부 핵심 키워드는 돌봄 정책으로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 안에서 one-stop으로 통합 돌봄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공공서비스 강화다.

이러한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남구는 2018년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관 협치 의 ‘복지플러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관 협력으로 지역기반 기틀을 마련하고, 남구만의 복지플랫폼인 ‘행복한 복지 7979센터’를 개설했다.

7979센터는 민선 7기 새롭게 출발하는 김병내 청장의 주민과 한 첫 약속이며, ‘행복한 복지 남구 실현’이라는 남구 구정 운영의 뜻을 잘 전달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라는 비전을 갖고 출발했다.

충실한 사전 설치 계획을 준비했고, 실현가능한 복지욕구 해결을 위해 발로 뛰어 지난해 6월 드디어 ‘행복한 복지 7979센터’가 전국에서 4번째로 개소했다.

남구 7979센터는 기존 콜센터 역할만 했던 타 기관 (서울 금천구, 서대문구, 경기 안양시)과 달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무엇보다 민간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봉사자 모집으로 ‘7979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집을 직접 방문, 전구와 방충망 교체 등 소소한 생활불편 사항 등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또 ‘7979 콜센터’는 복지직 베테랑 공무원 4명이 배치됐다. 누구나 콜센터(607-7979)로 전화만 하면 복지 분야 종합 원스톱 상담은 물론 최초 상담을 통한 대상자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힘이 되게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며, 콜상담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주민이 알아야 할 복지정보를 주기적으로 알리기 위해 ‘7979카카오톡 친구맺기’로 실시간 1대 1 선제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속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비했다.

‘7979 복주머니’는 주민이 원하면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클릭하고, 전 부처 링크를 통해 보건·복지·주거·교육·의료 등 담당자 연계와 매뉴얼 등 관련 신청서식까지 출력하여 빠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지난해 센터 개소 후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콜센터 상담 1만 6,789건, 사각지대 발굴 554건, 7979봉사단 소소한 민원 311건 처리, 카카오톡 친구 맺기 1,240명으로 1년이 지난 현재 지역 특성에 맞는 남구만의 복지플랫폼 ‘행복한 복지 남구 7979센터’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7979’는 친구 친구를 알기 쉽게 숫자로 표현해서 누구나 쉽게 친숙하게 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명칭의 콜센터 대표 번호다.

콜 센터의 역할은 무엇보다 분산된 복지서비스 기능 개선과 타 부서와의 칸막이를 줄이고 지역 인프라를 활용, 민·관이 함께 따뜻한 포용적 복지 돌봄을 추구함에 있다.

앞으로도 7979센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꾸준히 발전하고자 주민과 소통하고, 방향제시를 위한 네트워킹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해 가고자 한다.

지역의 복지 문제는 주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고, 공공재원 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 자원을 발굴, 신규 사업 개발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추진해 갈 계획이다.

열정과 따뜻한 가슴으로 꼼꼼하게 복지정책을 펼치는 김병내 청장과 남구 공직자들은 이 순간에도 ‘힘이 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돌봄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욱 세밀하게 살피는 현장 위주의 복지행정으로 남구민의 복지체감도를 한층 끌어 올리는 노력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광주 남구가 전국 최고의 복지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때까지 ‘행복한 복지 7979센터’가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독자광장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코로나 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외출을 꺼리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집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소소한 취미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달고나 커피’ 같이 천 번 이상 저어 만들 수 있는 재미있는 요리법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정도다. 그러고 보면 ‘집안에서의 식물 키우기’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플랜테리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플랜테리어’는 식물(plant)과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다. 다양한 식물로 실내를 꾸밈으로써 공기정화 효과와 심리적 안정 효과까지 누리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반려식물’이다. ‘반려식물’이란 식물을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반려동물’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신조어라고 할 수 있다. ‘반려식물’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물론 1인가구의 증가 속에 외로움과 지루함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안성맞춤이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시대엔 더욱 그렇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심리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이제는 ‘심리방역’도 필요한 때다. 코로나시대, 각자 자신만의 ‘반려식물’과 함께 답답한 집콕생활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기대한다.

/농협중앙교육원 김학수 교수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朴元雨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0
경제부 (062) 720-1066~67 논설실 (062) 720-1032
사회부 (062) 720-1050~54 전산실 (062) 720-1033
사회2부 (062) 720-1044 월간국 (062) 720-1006~07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관리국 (062) 720-1012
문화부 (062) 720-1071 판매국 (062) 720-1004
체육부 (062) 720-1041 사업국 (062) 720-1011,1099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TEL (062) 720-1050~54 •사회부장 010-6633-8826 •FAX (062) 720-1080~81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TEL (062) 720-1016~17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인쇄처 주식회사 광주일보사

사설

국가지정 치료병상 장기적 대책 시급하다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국가지정 병상이 포화상태여서 비상이다. 확진자 중 상당수가 고위험군의 고령자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내 국가지정 병상은 전남대병원 7개, 조선대병원 10개, 화순전남대병원 4개 등 21개다. 전남대병원은 풀가동 상태이며, 조선대병원 8개, 화순전남대병원은 1개를 사용 중이다. 중증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5개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호남권으로 확대해도 추가 병상은 전북대·원광대 병원을 합쳐 13개뿐이다.

중증 확진자 추이를 보면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위·중증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병상 재조정에 들어갔다. 증상이 가벼운 확진자를 전담병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인 파업으로 인력수급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명분을 잃었다는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의 지적에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에 3일 만에 84명이 지원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벗고 나선 지원단이 나눔과 연대의 광주공동체 정신을 발현하길 기대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염병 특성상 고령 확진자의 경우 갑자기 중증으로 악화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지정 치료병상 부족은 사망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만큼 방역당국은 장기적 안목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순천시 위민행정 갈 길 멀었다

순천시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 위민행정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면서 시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순천시는 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며 ‘상품권 가맹점주’는 상품권 구매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현 시스템으로는 가맹점주의 부정유통을 막을 수 없으니 이들의 구매 자체를 막은 것이다. 순천시내 상품권 가맹점이 9,000여곳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9,000여명의 가맹점주를 ‘잠정적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와 함께 순천시가 최근 공모한 순천시혁신농업인센터 설계안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모에 참여했던 한 건축사는 순천시가 실시한 건축설계 용역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공모 결정자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제기한 이 건축사는 “공모에 선정된 건축사는 심사과정에서 감점이 아닌 실격 대상으로 처리가 돼야 하는데 순천시의 비호아래 선정심의를 받았다”며 특혜의혹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순천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안전문자와 관련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문자발송이 늦고 동선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급기야 지난달 28일 청와대 게시판에 ‘순천시의 확진자 동선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순천시 방역관리를 중앙에서 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접수하는 등 시민들의 시 행정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황당하고 세밀하지 못한 일련의 행정행위로 시민들은 한숨을 내시고 있다는 것을 순천시는 직시해야 한다. 서민들의 삶이 어려울수록 이를 보듬고 챙겨야할 곳이 행정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계 총파업 정치적 활용 안돼

기자수첩

김영민
사회부 부장대우

의료계가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방침’에 총파업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314명 중 300여명, 조선대병원은 전공의 142명 중 12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광주기독병원과 보훈병원, 국립나주병원, 순천 성가롤로병원 전공의들도 동참했다. 대학병원들은 증세가 호전되거나 경증인 환자를 중심으로 전체 입원 환자의 10~20%를 2차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전공의들의 총파업 명분은 확실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시설을 늘리고 의사만 많이 뽑으면 ‘의료의 질’ 저하와 함께 각종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무분별한 의료 복지 양적 확대보다는 환자의 치료에 중점을 준 각종 의료수가 조정과 처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의료수가를 일방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고 의료진이 지역 보건·건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조합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총파업은 불법이다”며 “행정명령과 불이행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했다.

상황의 표면을 보면 의료계의 총파업은 용납되지 않는다. 감염병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의사들이 본연의 의무를 져버리고 ‘밥그릇 챙기기’가 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을 다녀온 독자 또는 지역민이라면 알 것이다. 딱히 상급병원 의료 공백은 글쎄… 체감되지 않는다.

대학에서 은퇴하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한 의대 교수 한 분과 낮부터 진탕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 한적이 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전염병이지만 의사들은 적어도 양심상 아픈 환자를 버리고 뛰쳐나가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창궐이라는 이 상황을 누가 활용하는지, 의사들 가운데 본인이 생업이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몇이나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고개를 가로 저으며 나를 배웅하는 선배의 뒷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다.